택시-버스 밥그릇 다툼… 시민만 피곤하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른 버스업계의 무기한 운행중단으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 갈등이 장기화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보조금 현실화 해 달라"

◇택시업계 주장=버스업계의 반발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요구는 지난 2004년 시작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의원 5명이 입법을 제안했다.

택시업계의 주장은 고유가로 24시간 대중을 위해 일하는 택시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의 임금이 월평균 125만원으로 300만원대에 이르는 버스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이 버스는 대당 854만원 이르지만 택시는 176만원에 그치는 부분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다.

"고급 교통수단… 지원 명분없다"

◇버스업계 반발="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는 공감하지만 고급교통수단인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으로 대중교통 기능 훼손 ▲국민 혈세 낭비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지원 감소 등의 우려도 있다.

또 개정안 자체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김동기 이사장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항의했다.

마을·통근버스 등 603대 투입

◇시·도 대책=광주시는 22일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마을버스 33대, 자가용승합차 320대, 유관기관 통근버스 50대 등 모두 403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하고, 전세버스 200대를 임차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평시 93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수요의 60%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상운송허가 ▲8185대의 택시의 부제 해제 ▲마을버스, 지하철 최대 2배 증편운행 ▲자가용차량 요일제 해제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21일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파업 참여 여부를 조율한 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툭하면 파업… 해도 너무한다"

◇애꿎은 시민만 피해='교통 수단'을 놓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업계의 움직임은 광주에서만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말에는 택시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감차 보상책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9월에는 버스업계가 광주시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양측 업계가 대립하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버스와 택시 모두 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참 〈8694〉 김종두

관광버스도 가짜 석유

43억 판매 운전자·주유소업주 등 무더기 검거

유사석유를 제조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부 관광버스 운전자도 유사석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이나 관광객의 안전도 위협받게됐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주유소 업주 범모(50)씨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5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 운전자 강모(39)씨 등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범씨와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와 장성 등에서 난방용 등유 2000ℓ에 유압작동유 4ℓ, 세탄부스트 1ℓ를 섞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제조,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영업용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43억원(300만ℓ 상당)어치를 판매했다. 이들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경유대신 판매하고 화물차주들이 구입한 이유는 비싼 기름값 때문.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평균 400원 가량 싸다.

실제 15t 크기의 덤프트럭 1대에 가득 주입되는 연료량은 400ℓ로, 경유대신 등유로 만든 유사석유를 주유하면 차주는 16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이틀에 1번꼴로 주유한다면 연료비만 매달 2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강씨 등 차주들은 유사석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 등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화물차량에 지급하는 ℓ당 330여원의 유가보조금마저 챙겼다.

'싼값'을 무기로 막대한 양이 팔렸지만 유사석유는 연료 윤활성이 떨어지고, 연료펌프 등이 쉽게 마모될 수 있어 운행 중 엔진이 멈추는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원전 미검증 부품 납품 검증서 위조 대표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0일 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로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K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회사로, 품질 검증 대행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회사 과장 정모(36)씨에 대해 함께 청구된 영장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상 등산객 구조 이렇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과 군인,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광주시 북구 무등산 일원에서 열린 산악사고 대응 합동훈련에서 광주북부소방서 대원들이 부상당한 등산객을 로프를 이용해 구조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갬코 부실' 광주시청 압수수색

檢, 위법행위·공무원 공모 파악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는 총인저감시설 관련 수사, 최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상품권 관련 수사 등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광주시청 문화산업과와 문화관광정책실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문화산업과는 이 사업 추진을 주도한 주무 부서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갬코 사업 추진 과정과 내부 결재 사항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의 부실한 기술력을 사전에 알고도 투자를 강행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임 혐의로 구속된 광주 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김모 대표와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구속하기 앞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광주시나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K2AM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갬코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개발을 목표로 GCIC와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으로, 광주시는 GCIC를 통해 K2AM에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 무산을 선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속 김광준 검사' 추가 비리 조사

수사팀 보강… 검사만 13명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특임검사팀은 검사만 13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 진용을 갖췄다.

과거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 당시 특임검사팀을 구성했을 때 투입된 검사 수가 5~6명인 점을 고려하면 배 이상 큰 규모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9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구속된 김 검사의 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비리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황주홍 벌금 50만원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20일 유권자들에게 특산품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가공인물 내세워 건설자재 슬쩍

쌍나팔

○…광주 서부경찰은 20일 가공인물을 내세워 현장 소장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시킨 뒤 고물상 업자들을 끌어 들여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철제 구조물(H빔 형태)을 훔친 박모(56)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물상 업자인 김모(53)씨 등 2명과 함께 화순의 한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크레인과 트럭 등을 이용, 철제 구조물 등 47t(피해자 주장 1억2000만원 상당) 가량의 자재를 훔쳐 판 혐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김씨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공인물에게 철제 구조물 처분을 허락하도록 시킨 뒤 이를 판 금액의 일부를 챙긴 사실을 확인.

/김경인기자 kki@